

# 체제유지를 위한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고려

최진욱\*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 |
| II. 북한체제 전망의 세가지 시나리오 | IV. 결론           |

## I. 서론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이후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정권수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난, 외화난, 식량난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탈북자의 증가와 사회일탈현상의 증가 등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 2주기를 맞이한 올해에도 김정일의 공식승계 지연은 군부의 역할증대 등과 맞물려 북한지도부내의 강온파 갈등설을 야기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과 올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해에 연이은 흉수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sup>1)</sup> 북한은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방국가들 및 국제기구에 식량원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협동농장 운영형태인 분조관리제에 초보적이거나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sup> 또한 최근에는 자본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농민시장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sup>3)</sup>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4)</sup>

비록 변화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와 같이 북한은 경제난 탈출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잠수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한당국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제네바합의의 파기위험을 하는 등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북한이 생존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정치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우선 북한체제의 변화전망을 조망해 보고, 북한이 생존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치적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 
- 1)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평양상주사무소는 북한의 1996년도 식량수확량은 3백만톤이며, 이는 북한주민이 일년간 필요로 하는 5백만톤의 6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1996.11.19.
  - 2)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 식량난을 반영하여 북한은 분조관리제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즉 분조의 규모를 종전의 10~25명선에서 7~8명선으로 축소하고, 분조단위의 생산계획을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의 90%로 낮게 설정하였으며, 초과생산분에 대하여서는 처분권을 분조에 넘겨주는 조치인 것이다.
  - 3) 농민시장은 북한당국의 묵인하에 5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나, 거래물품은 텃밭과 농업 생산품에 한정되었으며, 10일에 한번씩만 개장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과 생필품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텃밭에서 가꾼 야채는 물론 쌀, 옥수수 등의 식량과 심지어 컬러 TV와 의류까지 농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농민시장이 매일 개장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
  - 4)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과 유럽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였으며, 특히 9월 13일부터 3일간 현지에서 17개국 407명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 II. 북한체제 전망의 세가지 시나리오

북한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북한의 장래는 대략 세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될 수 있다.<sup>5)</sup> 첫째, 북한이 과감한 개방·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현재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발전해 나갈 것이다. 둘째, 북한이 현재 노출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붕괴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개방을 차단하면서 현 체제하에 근근히 생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첫번째 시나리오에 의하면 북한이 과감한 개방·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외부영향의 유입을 적절히 통제하여 큰 사회적 동요 없이 중국식의 경제발전을 이룬다. 그러나 북한이 그 동안 사회적으로 극도의 폐쇄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권에서 유래가 없는 왕조체제를 구축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소위 주체경제의 기치하에 자급자족체제를 고집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첫번째 시나리오는 매우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이 외국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부사조의 유입과 같은 부작용으로 북한지도부가 위험을 감수하며 과연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회의적이다. 실제로 1995년 민족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장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대답은 극소수(4.5%)에 불과하였다.

두번째 시나리오인 북한붕괴는 사회주의권이 연쇄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매우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북한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언한 붕괴시점을 이미 수차례나 큰 문제없이 넘겨왔다. 특히

5) Eberstadt는 북한체제의 전망을 reform, muddling through, collapse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 : Reform, Muddling Through, or Collapse?" *The NBR Analysis*, vol. 4, no. 3.

북한은 핵위협을 통한 대미접근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북한최대의 위기조차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항유하고 있는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이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고 버티기 정책으로 현재의 폐쇄체제를 유지하는 한, 북한체제는 상당기간 유지된다는 것이다. 현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버티기 정책이 북한의 입장에서 결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방과 개혁이 체제안정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북한이 남한과의 접촉을 극도로 불편해 하며, 가능한한 이를 기피하려는 것은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여러번 입증된 바 있다.

북한의 버티기 정책이 성공하리라는 믿음은 다음의 몇가지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외국과의 교역이 북한 전체경제의 12%에 불과한 자급자족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한 체제유지는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체제는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왕조체제로서 강력한 국가 억압기제에 의하여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통제된 사회이다. 셋째, 조선노동당은 다른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처럼 엘리트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서 인구의 15%에 이르는 약 300만명의 당원을 갖고 있다.<sup>6)</sup> 이들 당원은 체제에 매우 복종적이며, 북한이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제수호의 전위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혁명의 대상으로 삼는 남한은 북한주민들을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중국이라는 여전히 믿음직한 이웃이 있으며, 미·일·러 등 주변 강대국들 역시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있지 않다.

6) 북한의 당원수는 1961년 4차 당대회에서 1,311,563명으로 밝힌 이후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김일성의 연설 등에서 3백만 당원의 표현을 써왔다. 최근 북한 중앙방송이 운영하는 국제방송(1996.10.10)은 김일성이 생전에 “5백만 당원들이 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단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일보」, 1996.10.14.

따라서 북한은 개방·개혁을 하지 않으면서도 버틸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며, 폐쇄적인 버티기 정책을 유지하는 동안 북한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버티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북한체제를 과멸로 이끌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버티기 정책이란 북한의 붕괴를 잠시 지연시킬 뿐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무조건적인 버티기 정책보다는 체제에 대한 과급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본적인 개혁 없는 제한적인 개방을 통한 생존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금년에도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 III.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

#### 1. 남한당국배제

북한이 생존전략으로서 가장 우선시 하는 정책중의 하나는 남한배제전략이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남한의 북방정책 등으로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등을 겪게 되고, 남북한의 점증하는 국력격차로 인하여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된 북한은 당분간 남한과 공존정책을 견지하면서 접촉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남북공존을 수시로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공존정책은 통일정책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198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조국통일 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도 아니고 일방이 타방

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주장한데 이어서,<sup>7)</sup> 동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주년 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8)</sup>

북한은 1991년 생존전략차원에서 기존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1991년 1월 1일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sup>9)</sup> 김일성의 연방제에 대한 발언은 과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과 분명히 구별되는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에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통일의 최종단계로 연방제를 제안하였던데 반해서, 1991년의 수정안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형태의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으로서 잠정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다. 즉 중앙정부는 단지 남북한의 상징적인 중심 역할만 하고 지역정부에서 경제·문화 뿐 아니라 군사·외교권까지 보유하게 되며, 이와 같은 국가연합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체제의 통일을 이룬다는 방안이다.<sup>10)</sup>

7) 「조선중앙연감 198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p. 1~7.

8) 「조선중앙연감 1989」, p. 29.

9)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

10) 북한 연방제안의 국가연합성격으로의 수정은 이후 북한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되풀이 되어 주장된다. 1991년 윤기복 최고인민회의 조국통일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남북한의 2개 정부가 일정 한도내에서 잠정적으로 외교·군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1992년 5월 29일 김병홍 북한평화연구소 부소장은 “1민족 1국가 아래 2체제 2정부가 양존하는 연방제 통일이 합리적”이며, “지방자치 정부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되 동권한을 점차 중앙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1992년 6월 23~25일 하와이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이삼노 북측대표는 “남북지역정부가 외교권·군통수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두개 제도와 두개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의 분열을 끊임없이 지속시키자는 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sup>11)</sup> 된다고 말함으로써 실제로 연방제에 의한 완전한 통일을 포기하고 현존하는 남북한 두 체제의 잠정적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1993년 4월 7일 북한의 강성산 정무원 총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이하 「10대강령」)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10대강령」의 제1항은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는 것과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빨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sup>12)</sup>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대강령」 제1항은 북한의 통일정책이 체제유지적 현상유지정책으로 수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1991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당분간” 남북간의 공존을 의미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이 혁명전략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sup>13)</sup> 북한의 대남정책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의하

11)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

12) 「로동신문」, 1994년 4월 8일.

13) 북한의 “남조선 혁명전략”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는 우선 북한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등에 규정된 당과 국가의 목적에 있다. 1992년 4월 9일 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되어 있으며, 同 10條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관철한다”고 되어 있

면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남한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완성되어 인민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부와 북한의 현정부간에 협의하여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고, 연방제는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14)</sup>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역시 남북한에 현존하는 양체제의 인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본적인 통일정책과는 모순되며, 그 실제 의도는 남한내에 프로레타리아 계급혁명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다는 것이다.<sup>15)</sup> 즉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북문제를 국내문제화시켜 미국의 개입여지를 봉쇄한다든지, 3者會談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그밖에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한미군철수, 공산당활동인정, 북·미평화협정체결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전략」을 완수하기 위하여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sup>16)</sup> 「10대강령」 역시 남북공존에 대한 표면적인 표시일 뿐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sup>17)</sup>

다. 또한 제6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다. 즉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규약에 의하면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이란 남한의 프로레타리아를 해방시키는 계급혁명이며, 남북의 프로레타리아계급간의 통일이고, 따라서 통일한국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프로레타리아 공산사회를 의미한다.

14) 이상우, “남북한통일정책의 논리구조비교 : 민족화합과 계급투쟁의 대결,” 이상우 편,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 : 박영사, 1987), p. 119.

15) 이상우, “남북한통일정책의 논리구조 비교,” p. 114.

16) 1990년 김일성은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 직후 남북한과 해외지역을 망라하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의 결성을 추진하여, 동년 12월 17일과 1991년 1월 25일 각각 범민련 해외본부와 북측본부를 구성하였다. 이어 북한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결성을 위하여 남한내의 투쟁을 지원하는 등 통일전선전술차원의 대남정책을 정교히 추진하고 있다.

17) 즉 「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이라는 구호하에 민족주의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남정책에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이 북한헌법과 조선노동당규약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전제조건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 「남조선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전략의 대안으로서 혁명전략을 늘 유지하여 왔고,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대목표인 남조선혁명에 대한 꿈과 희망을 결코 버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이후 북한은 그 실현 가능성의 어려움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으며,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조선 혁명보다는 체제유지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의 공존정책은 대외적으로 남한배제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up>18)</sup> 북한의 남한배제정책은 핵카드를 이용한 대미협상이 궤도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 타개와 외교적 고립탈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80년대후반부터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착수한 바 있다. 북한은 1988년 12월 6일 북경에서 미국과 참사관급 접촉을 시작한 이래 1992년까지 28회에 걸쳐서 대미접촉을 지속해 왔다. 북한의 대미전략은 과거 주한미군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폐기, 한·미관계의 이간 등 대남혁명의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 시기 들어서 경제협력촉구, 국제적 고립탈피, 체제존중보장, 생존위협물(팀스피리트 훈련, 미국의 핵우산)제거 등 생존유지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19)</sup> 또한 북한은 1990년 9월 일본에 수교교섭을 제의하였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임

---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남한내 국분분열을 기도하고 있다. 또한 제9항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일전선전술이 북한의 일관된 대남정책을 구성하고 있다는 보여준다.

- 18) 1991년 9월 북한이 그토록 반대했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중국이 더이상 남한단독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통보한 후에 마지못해 결정하고 말았다. Nicholas Eberstadt, “Can the Two Koreas be One?,” *Foreign Affairs*, vol. 71 (5) (winter 1992/3), p. 153.
- 19) 유석열, “북한의 대미수교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 p. 1.

으로써, 1991년 1월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이 시작되어 1992년까지 8차례에 걸친 수교회담이 추진되었다. 북·일수교회담은 핵문제 등으로 그동안 진전되지 못하였으나, 금년 6월 24일 외교부 일본과장을 대표로 하는 「군축평화연구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수교교섭 재개문제를 논의하였다.

북한은 미·일과의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1993년부터 핵문제를 갖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사활을 건 일대 외교전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핵문제의 발생과 해결과정, 그리고 제네바합의 등 일련의 과정속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처음부터 무모한 모험주의나 고립주의라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미접근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NPT를 탈퇴하면서 내세운 NPT복귀조건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이 내세운 NPT 복귀조건은 1)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중지 2) 남한내 미군 핵무기와 핵기지의 완전공개 3) 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 4)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 등이며, 아울러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였다.<sup>20)</sup> 특히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미직접협상만 이루어지면 북·일수교협상과 남북경제협력도 순조롭게 진전될 것이라는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sup>21)</sup>

핵카드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협상과정에서도 재확인된다.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북·미 1단계회담에서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중단, 주한미군기지 사찰허용,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금지 약속,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 포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존중,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함으로써,<sup>22)</sup> 대미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제 1단계회담 후 북한과 미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sup>23)</sup> 북한은 특히 “서

20) 「중앙일보」, 1993년 3월 31일.

21) 오코노키 마사오, “미-북한 고위급회담,” 「세계일보」, 1992년 6월 2일.

22) 「세계일보」, 1993년 6월 3일.

23) 북한과 미국이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합의내용은 1)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로가 체제를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않는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에 만족을 표시하였다.<sup>24)</sup> 199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제2단계 회담에서도 북한은 1단계회담의 요구사항 이외에 휴연감속로를 경수로로 전환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국과 경제협력의 통로를 개설하여 북한의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sup>25)</sup> 즉 북한은 장기적인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경제재건이 필수적임을 파악하고, 이를 위하여 미국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제네바회담에서도 북한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핵동결을 조건으로 미국과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및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불위협과 불사용을 얻어냄으로써 외교적 고립탈피, 경제회생, 군사적 위협제거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회담에서 명시된 남북대화 착수에 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남한 배제정책은 미·북관계가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2. 승계지연 및 유훈통치

김일성 사망 2주기를 맞은 올해에도 김정일은 공식승계를 연기하였다. 김정일은 소위 ‘유훈통치’를 표방하며, 주민들의 애도와 이에 대한 자신의 배려를 표면적인 이유로 공식승계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유훈통치기간을 이용하여 정통성 확보와 김일성의 카리스마 전이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신에 대한 우상화작업과 김일성과의 동일시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이 기간 중 자신의 업적을 축적하고 현지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2) 전면적인 안전보장 장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상호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3)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세계일보」, 1993년 6월 13일.

24) 북한대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의 발언. 「한겨레신문」, 1993년 6월 13일.

25) 유석열, “북한의 대미수교전략,” pp. 10~11.

도를 강화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즉 북한은 김정일의 공식승계 연기와 유훈통치를 통하여 김일성의 영향력을 최대한 연장시킴으로써 경제난 등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이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북·미관계개선 등 김정일 시대를 여는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금년 김일성 사망 2주기를 맞아 북한의 미래는 김일성의 유산에 기초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 바 있으며, 김정일은 사상적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일 생일 5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당비서 최태복은 “김정일은 수령과 사상도 같고 뜻도 같은 오늘의 김일성이다”고 말하였으며, 「로동신문」(1996.2.15)은 “후계자는 수령을 닮으며 수령은 후계자의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소위 김일성 환생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일성 환생론은 김일성 사후 나온 “아버이 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이다”라는 일체론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력승계는 후계자로 지명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행사하였던 권력과 권위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sup>26)</sup> 김정일의 당권장악 역시 단순히 총비서나 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계승받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령중심적 정치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일이야 말로 바로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를 획득하는 요체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도 당권장악과정에서 김일성의 직위를 승계하는 작업못지 않게 수령의 지위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일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찍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였고 이상화 작업을 전개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김일성과의 일체화작업과 카리스마 전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은 김정일이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1967년 유일사상체계확립에 깊숙히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사상사업에 일찍이 관심을 갖게

26) 양승합, “북한의 권력승계정치와 체제 및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Ⅲ) : 북한체제 및 정책변화 전망 분야』 (서울 : 통일원, 1993), p. 163.

되었으며,<sup>27)</sup>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에 대한 김정일의 독점적 해석권이 확고해졌다.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후 김정일은 1991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2년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4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을 통해서 부동의 권위로 자리잡았다.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작업 역시 김정일의 출생, 효성, 천재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80년대 초반이후 꾸준히 전개되었으며, 김일성 사후 공식승계를 앞두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김정일의 출생을 항일혁명의 전통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김정일은 “항일혁명투쟁을 벌이시며 구국성전을 이끄시던 전설적 영웅이시며 질세의 애국자이신 항일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과 여성의 몸으로 손에 총창을 쥐시고 조국광복의 성전에 나서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아드님”<sup>28)</sup>으로서, 단순히 수령의 아들로써가 아니라 항일투쟁의 영장 김일성과 여성영웅 김정숙의 아들로써 혁명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이 강조되어 왔다.

또한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당위성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3대위인’논리에서 찾기도 한다.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은 과거와는 달리 김일성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보다는 “김정일을 낳아 주체혁명의 위대한 계승을 마련한 것”으로 ‘불멸의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

27)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전원회의에서 갑산파가 숙청된 이후 ‘사상여독’을 청산한다는 명분하에 문화예술부문에서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주도하였으며 1960년 후반에는 혁명적 수령관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된 직후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언하고 수령의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공산주의사회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지도사상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이론’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는 100년 전, 50년 전 과학적 공산주의이론의 창시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나, 현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해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완벽성과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없는 내용에 관한 한 자신이 해석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다.

28) 탁진 외, 「김정일 지도자 제1부」 (동경: 동방사, 1984), p. 5.

하였다.<sup>29)</sup>

이와 같이 김정일은 출생부터 혁명가계 출신인 것으로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장소 역시 혁명전통에 가득찬 것으로 선전되었다. 김정일의 출생장소를 백두산의 항일유격대 밀영이라고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의 출생시점과 장소는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강조되었다. 또한 김정일은 조선사람들이 시조 단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김정일의 출생에 대한 상징조작을 강화하였다. 우선 김정일의 생일을 1982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한데 이어, 1986년에는 이를 공휴일로 하였다. 1987년 김정일이 출생하였다는 백두산 밀영(고향집)이 일반에 공개되고, 1988년 백두산 밀영을 내려다 보는 봉우리를 「정일봉」이라 이름을 붙이고, 「정일봉」을 혁명사적지로 지정하였으며 「김정일화」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이 김정일의 출생을 온 사회에 알리기 위해 “백두산에 김일성장군 계승인 탄생” 등의 구호를 새겼다는 소나무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북한은 김일성사후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를 강화하는 이유는 김일성과 같이 항일무장투쟁과 반미구국투쟁의 경험이 없는 김정일이 김일성 수준의 카리스마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김정일의 현지도 역시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금년 12월 1일까지 김정일은 총 44회의 공식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이중 17차례는 군부대 방문이었고 군관련 행사는 31회에 달하였다. 최근 금강산 발전소, 원비산 발전소 등 경제건설현장과, 문화휴양지 등을 방문하는 등 현지도도를 부각시켜 세습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현지도도를 계승했음을 강조하면서, 「두분의 수령」, 「수령그대로인 김정일」 등의 표현을 통해 이미지를 전이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9) “김정숙 사망 45주년 추모사에서 한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의 보고,” 「중앙방송」, 1994.9.22.

### 3. 주민포용정책 및 사상사업강화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에 이은 김일성사망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은 체제결속을 위하여 사상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포용정책을 병행하는 전형적인 ‘회유와 강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sup>30)</sup>

북한은 동구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인 당이 영도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사회주의위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영도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일은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간부대열이 정비되어야 함과 당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sup>31)</sup>

즉 북한은 사회주의의 실패원인을 사상의 변질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자들의 과산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하에 사상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당들은 사회주의에 관한 선행리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면서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사상사업에 마땅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경제건설 일면에 매달림으로써 경제건설 자체도 침체에 빠뜨렸으며 구성은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고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sup>32)</sup> 이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사상사업이 경제발전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북한의 개방정책이 주체사상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사상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

30) 허문영,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과 전망,” 「북한의 대외관계변화와 남북관계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제22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1996.11), p. 28.

31)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1992.10.10),” 「로동신문」, 1992. 11.2.

32)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 19),” 「로동신문」, 1996.6.21.

하는 것은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최고의 정치조직이며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사상사업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sup>33)</sup> 즉 김정일은 사상사업은 당의 영도하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일이 내세우는 이른바 광폭정치와 인덕정치에 잘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은 “광폭정치란 기본군중 뿐만 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듯이 손 잡아 이끌어 주는 정치”라고 정의하면서,<sup>34)</sup> 인민을 출신계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폭넓은 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전환기 북한에 있어서 필요한 정치지도자는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을 사랑하는 덕성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정치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sup>35)</sup> 김정일은 “우리당의 인덕정치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고 말하면서, 인덕정치는 곧 광폭정치라고 말하였다.<sup>36)</sup>

당이 인민대중과 괴리되는 것을 체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파악한 김정일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듯이 보살피 주듯이 당이 인민

33) “사상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사상분야에 그 어떤 잡사상도 침습하지 못하게 하고 사상사업의 혁명적 사회주의적성격을 고수할 수 있으며 온 사회에 하나의 사상, 사회주의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할 수 있다.”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34) 「로동신문」, 1994.1.28.

35)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로동신문」, 1994.11.4.

36) “우리당의 인덕정치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사랑과 충성에 기초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가장 공고한 단결이며 이러한 일심단결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간부들은 철저히 혁명화되어야 하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창조적 역할을 높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다.<sup>37)</sup> 북한은 김정일의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통해서 계급정책을 완화하고 주민 포용 제스처를 씌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제결속의 일환으로 강화되고 있는 사상사업은 구체적으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단결로 귀결되고 있으며, 혁명적 의리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취가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1996년 들어 ‘붉은기 철학’을 내세우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재해석한 ‘장군님의 한식술론’ 전개하면서 주민들의 사상적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들어 증가일로에 있는 탈북자를 ‘혁명을 버린 비겁자’로 매도하는 한편, 김정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제국주의 책동’을 분쇄하자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외부사조의 침습을 방지”하고자 각종 총화와 학습강연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sup>38)</sup> 최근 북한은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혁명적 의리’, ‘동지애’ 등의 선전구호를 내세우며 사회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37) 사회주의에 대한 선행리론은 혁명투쟁에서 물질경제적요인을 기본으로 보면서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함으로써 사람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객관적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가 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38) 96년 8월 28일 청년절 5돌에 발표한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여 가자”라는 김정일의 담화를 통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노동신문」 사설(1996.5.30)을 통해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체제를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역설하였다.

39) 96년 들어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체제결속을 위한 선전선동 내용을 보면 청년학생들의 소위 「인민군대 입대 탄원대회」가 평양, 개성 신의주 등지에서 연달아 개최되었으며, 4월 9일에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3돌을 경축하는

요컨대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사업의 강화와 당이 인민의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문성이나 경제발전보다는 당성과 당의 영도적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상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사상사업의 강화만이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것이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고 강조하였다.<sup>40)</sup> 위기에 처한 북한은 당분간 사상사업의 강화에 전념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당의 지위는 당분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측근인물 중용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한 사상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노동당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당지도부가 김정일의 핵심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김일성 친인척, 빨치산출신 혹은 빨치산2세출신 등의 출신성분과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 종합대학, 해외유학의 교육배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자동적으로 김정일의 측근세력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41)</sup>

당의 중앙집권적 지도체제확립 과정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

---

충성의 맹세모임, 경축야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또한 소년단 창립(6.6) 50주년에 즈음하여 「축복의 편지 이어 달리기」를 처음으로 진행, 청소년들의 김정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촉구하였다. 같은 목적으로 8월 21일 중앙방송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8월 15일 해방 51주년 기념에 즈음한 「로동신문」사설과 9월 8일 정권창건 48주년을 맞아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충신이 될 것을 호소하였다.

40)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41) 북한권력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48~80을 참조.

국, 비서국 등과 같은 당 지도부와 기층조직에 대한 물갈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수의 기존인물들이 탈락하고 새로운 인물이 대거 부상하였다.<sup>42)</sup> 김정일은 당지도부에 대한 물갈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당내에 구축하여 나갔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당의 핵심부서를 장악하게 하였으며, 비서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당비서를 중심으로 한 핵심세력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김정일의 친인척, 근무연고자, 혹은 승계과정에서의 공신들로서 김정일의 측근세력들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친인척으로는 당비서 김중린, 김용순, 황장엽과 김열부장 김경희,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장성택 등이 있으며, 정치국원 박성철, 김영주도 김정일의 친인척이다. 특히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은 능력과 충성심이 뛰어난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 황장엽은 김정일의 대학시절 선생으로 김정일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에 공헌한 바가 크다.

친인척 못지 않게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룹은 한때 김정일과 함께 근무하면서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당비서인 김기남, 김국태, 전병호는 조직지도부 혹은 선전선동부에서 김정일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에 헌신한 일등공신들이다. 김정일이 1968년 선전선동부 과장으로 근무할 때, 부부장이 김기남이고 부장

42) 1970년 개최된 제5차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117명 중 85명인 72.2%가 새로운 인물이었으며, 정치위원회의 경우 11명 중 6명(54.5%), 비서국의 경우 11명 중 8명(72.7%)이 새로운 인물이었다. 1980년 개최된 제6차당대회에서는 10년전인 5차당대회에서 선출된 117명의 당중앙위원 중 55명이 탈락되어 47%의 탈락율을 보였다. 한편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144명 중 83명(57.6%)이 새로운 인물이었다. 한편 정치국의 경우 19명 중 12명(63.2%), 비서국의 경우 9명 중 8명(88.9%)이 새로운 인물로 핵심부서일수록 교체의 폭이 컸다. 특히 6차당대회에서는 혁명 2세대의 진출이 두드러져 정치국의 경우 19명 중 6명이 혁명2세대였으며 비서국은 9명 전원이 혁명2세대로서 김정일의 측근세력이 대거 등장하였음을 의미하였다. 당지도부에 대한 물갈이와 함께 당중재발급사업을 통하여 당기층조직에 대한 개편도 단행되었다. 1972년 10월 시작된 당중교환사업의 결과 1978년까지 6년 동안 당원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김국태였다. 김기남은 하급자인 김정일과 밀착하여 1970년대 중반 소위 ‘결가지’론을 내세우며 김성애 일파를 제거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라는 구호도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sup>43)</sup> 김책의 장남인 김국태는 당선전선동부장 시절 김성애 제거에 앞장섰으며, 당역사연구실을 김일성역사연구실로 개편하고 김정일초상화를 김일성초상화와 동열에 놓도록 하는 등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에 헌신한 인물이다. 전병호는 김정일이 조직비서로 있을 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근무하며 김정일을 대리해 사실상 조직지도부를 관리해 온 핵심측근이다.

또한 1973년부터 김정일 밑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치국원 서윤석과 당비서 한성룡, 최태복 등도 김정일의 핵심측근들이다. 서윤석은 「유일사상체제확립 10대원칙」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으며, 최태복은 교육부에서 후계체제확립에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비서급은 아니지만 당농업부장 문성술과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윤승관도 김정일의 핵심측근이다. 문성술은 1963년 김정일이 대학졸업논문인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역할에 대하여」 작업시 자료수집차 평안남도 강서군을 방문했을 때 군당위원장으로 김정일과 인연을 맺은 후 1985년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오르는 등 김정일의 측근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윤승관은 김정일이 선전선동부 과장으로 있을 때 지도원으로 일하며 김정일의 신임을 샀다. 그는 김정일이 조직 및 선전선동 비서가 된 후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발탁되어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에 헌신한 인물이다. 문성술과 윤승관은 각각 조직과 선전분야의 전문가로서 비서 못지 않은 실세들이다.<sup>44)</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은 친인척이나 과거 개인적 인연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핵심세력으로 육성<sup>45)</sup> 당의 요직에 포진시킴으로써 당을 확고히 장악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핵심측근

43) 이항구,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 (서울: 신태양사, 1995), p. 95.

44) 위의 책, p. 319.

45) 한성룡과 전병호는 만경대혁명학원 입교전 김일성의 집에서 김정일과 함께 기거한 적도 있다.

들을 특히 당권장악의 교두보인 비서국에 포진시켰으며, 이들은 대부분 당권장악을 위한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출신들로서 비서국을 중심으로 김정일 당권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표 1〉 비서국 비서 변동추이, 1970~1993

1970.11	1980.10	1988.12	1990.5	1992.12	1993.12
최용건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 일	김중린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박성철	황장엽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김영주	김영남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오진우	김 환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김동규	연형묵	김중린	김중린	김중린	김중린
김중린	윤기복	서관히	서관히	서관히	서관히
한익수	홍시학	황장엽	황장엽	황장엽	황장엽
현무광	박수동	허 담	김용순	김기남	김기남
양형섭		박남기	윤기복	김국태	김국태
		허정숙	박남기	김용순	김용순
				윤기복	
				박남기	

출처 : 「로동신문」, 1970.11.14 ; 「로동신문」, 1980.10.15 ;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1983-1993」 (서울 : 북한연구소, 1994), p. 159.

1980년 김정일이 공식적 후계자가 될 당시 황장엽과 김중린이 비서가 된 것을 시작으로, 1988년까지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서관히가 합류하였으며, 1990년에 김용순이 비서로 선출되었다. 1992년에 김기남과 김국태가 마지막으로 비서로 선출됨으로써 현재의 비서국 진용이 갖추어졌다.

또한 핵심측근이 아닌 기타 당간부들도 대부분 김정일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이며, 김일성 시대의 사람들도 대부분 한 차례 이상씩 철직 이후 김정일에 의해 복권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철직기간중 김정일에 충성을 다짐

하며 김정일체제 확립에 헌신하고 있다. 즉 박성철, 김영주, 김중린, 이종욱 등과 같은 철직경험자들은 김일성 시대의 인물들이지만 사상개조과정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 김정일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sup>46)</sup>

김정일의 핵심측근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들이 중년층이나 청년층이 아닌 노년층이라는 점이다. 현재 당비서나 정치국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고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60대 이하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을 볼 때, 당고위층은 원로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위층 중에서도 80대에 들어선 혁명1세대 보다는 60대 혹은 70대의 혁명 2세대가 김정일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핵심측근들의 노령화는 70년대부터 당의 중견간부로서 김정일체제 확립에 헌신한 인물들이 계속 핵심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빨치산세대가 김일성의 핵심측근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과 유사하며, 김정일 시대도 이들 공신들에 의한 통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신들이 권력핵심부에 남아있는 한 김정일은 당권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통치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 IV. 결 론

북한은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생존전략을 추구하여 왔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대외적으로는 대미, 일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강화 및 순조로운 출범에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체제결속을 위한 사상사업의 강화와 당의 역할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부분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46)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서울 : 중앙일보사, 1994), p. 148.

안보위협을 해소하며 나아가 경제회생을 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sup>47)</sup>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생존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변화 움직임은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외부사조의 침습”을 철저히 막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북한체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한과의 거래는 철저히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당장 시급한 것은 경제회생과 김정일체제의 견고화 작업이며, 북한체제에 최대의 위협요인인 남한과의 직접접촉을 가능한한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지속적인 대북접촉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은 북·미평화협정제외에서 남한제외원칙을 견지하여 왔으며,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도 남한기업을 선별초청함으로써 남한기업의 참가를 무산시켰다. 또한 9월 18일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후 남한의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이 무장공비침투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북한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망발”이라고 비난하고 천백배의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서는 실정인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접촉을 통한 변화’와 교

47) 이와 같이 북한은 생존전략차원에서 대미,일 외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북한의 이러한 대외정책기조는 유지되었으나, 금년도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이 대미·일 관계개선노력과 함께 기존의 동맹국인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서방국과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외교적 고립탈피와 내년으로 예상되는 김정일의 공식승계를 앞두고 외교 다변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96년 9월 10일 러시아 정부는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의 효력상실에 따라, 작년 8월 북한측에 새로운 조약 초안을 제시하고 양측은 기본조약체결에 합의하였다. 특히 금년 10월 26일 발레리 데니소프 신임 러시아대사가 부임함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데니소프 대사는 엘친정부의 남한중심 한반도정책에 비판적인 인물로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위해 대북관계를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금년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35주년(7.11)을 맞이하여 사상최초로 중국군함을 남포함에 방문케 함으로써 동맹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류·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연착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지금까지 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통하여 현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체제고수를 전제로 제한적인 개방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에 위협요인이라고 판단되는 남한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기피하는 한편, 미국과의 접촉만을 통하여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체 제한적 개방을 고집하는 한 북한체제는 회생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북한이 처한 위기는 지금과 같은 제한적인 개방으로 결코 극복될 수 없으며,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는 제한적 개방은 북한의 붕괴를 단지 연장시킬 뿐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붕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북한의 붕괴방지에만 집착한다면, 북한체제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변하지 않는 북한은 언젠가 붕괴하고 말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연착륙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양보보다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이 배제된 채 북·미 직거래가 계속되는 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확고한 한·미공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남한은 북한이 안심하고 개방과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통일이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공포심이 사라질 때 북한의 체제개혁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